

도농통합 농촌지역의 효율적 농지이용방향

김기성

강원대학교 농공학과

I. 서 언

1995년 1월 전국적으로 인근지역의 시·군 간 도농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농업·농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가족단위의 소농경제는 상업적 가족경제로 변화하고 전문화, 다양화된 상업적 영농을 영위하게 되며, 공동체적이고 동질성을 가진 마을사회는 단순한 주거생활공간으로 남게 되며, 보다 광역적인 사회로 통합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춘천시를 비롯한 대부분 도농통합지역에서 전통적 농촌사회는 산업화 영향으로 인해 해체되고 새로운 경제여건에 따라 재편성 되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춘천시는 타지역에 비해 영농조건이 좋은 농지가 적으며, 특히 곡간지, 경사지, 수리불안전담 등 경지조건이 불리한 농지에 대한 타용도 전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기반의 현대화, 생산성 향상에 불리한 조건에 있다. 이는 춘천시 농업이 곧바로 부딪히게 될 문제의 하나로서 농경지 상당부분이 한계지화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농업구조 조정과 함께 효율적인 농지이용 방안 수립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 여기서는 1995년 11월 춘천시 농업구조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지이용 분야에 대한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농지이용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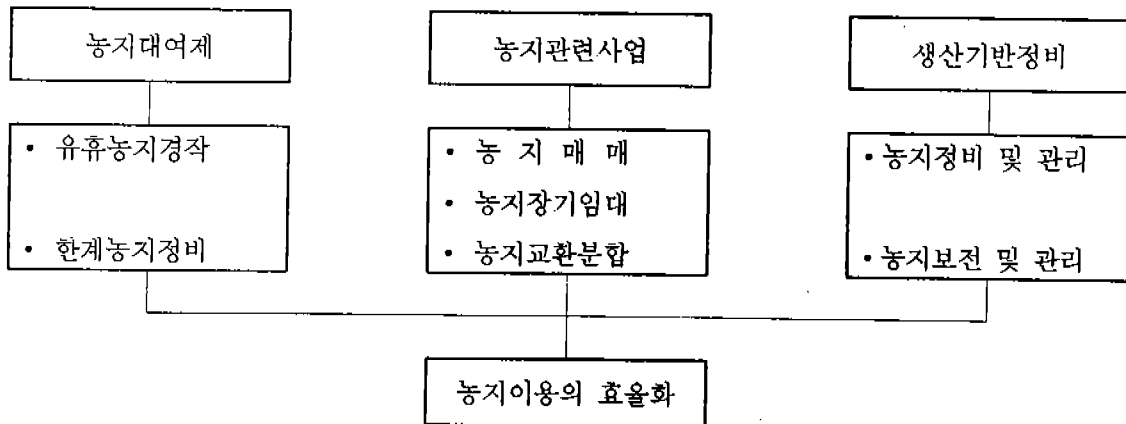


그림 1 시행중인 주요 농지이용 대책 및 사업

II. 농지이용에 관한 평가

표 1 도농통합후 농촌지역의 평가

- 도시중심 행정이 이루어지며 행정절차가 복잡해 짐
- 농촌지역에 각종 혜택이 없으며, 농정혜택이 감소함
- 지역간 균형발전이 안되고, 오지농촌의 소외감이 가중됨
- 장기적이고 종합적 개발이 가능함

표 2 영농불가능시 소유농지의 해결방향

- 고소득원 작물재배로의 활용
- 휴경상태로 둠
- 자급자족적 영농계속
- 계속 소유함
- 단기간에 출하가능한 작물재배
- 규모확대로 영농회사 형태의 관리운영
-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따라 해결
- 농업이외 다른 방향으로 모색 등

표 3 시행중인 농지이용사업에 대한 평가

- 사업 시행을 모르고 있으며, 절차가 복잡함
- 노동력 부족으로 위탁영농회사 설립추진이 바람직 함
- 농가 소유농지는 농가가 직접 영농할 수 있도록 함
- 전업농가를 위해 계속 추진이 필요함
- 작목별 집단화로 소유지분에 의한 주주형식의 영농추진
- 기계화,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단위 분합, 대규모 경작이 필요함
- 대여제도 보다는 자유로운 농지매매가 바람직 함
- 영농희망자에게 쉽게 대여되도록 제도의 보완·조정이 필요함
- 농가 개인에게 분배가 안되고 소수농가에게 만 혜택이 있음
- 우량농지 = 자경, 대여농지 = 휴경지의 인식으로 현실적 이해의 어려움
- 획일적 시행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의 시행이 필요

III. 결 언

이상의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춘천시 도농통합 농촌지역의 농지이용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수확량 증대를 위한 토지생산성, 농업기계화를 통하여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지기반을 조성한다.
2. 조건불리 지대로 대규모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관광형 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농가소득 향상 대책수립 및 지원이 요구된다.
3. 지속적인 생산성과 국토자원 보전을 위한 농지기반의 유지 및 보전대책을 유휴 한계농지 이용 방안과 연계 추진한다.
4. 지역의 균형개발(농업전업, 겸업) 차원에서 과소화된 농촌마을 활성화 대책과 연계하여 농업과 농촌의 병행발전을 모색한다.
5.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성 향상보다는 농촌환경의 관리·보전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촌에 주민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기반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지원이 필요하다.